

캡 없는 뉴스테이 설계 박근혜정부도 배임인가?

780여억원 출자 민간 건설사, 1조1500억원 배당 확보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 참여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이상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토대로 2021년 9월 주변 시세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3곳 사업장에 총 782억원을 출자한 4개의 민간 건설사는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는 평균 5배 이상인 1조1,500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동탄행복 프루지오(동탄2대우코크랩 뉴스테이) 사업은, 대우건설이 225억 원을 출자해 546억원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담초 설계했다. 그런데, 김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시세기준으로 이미 4,817억 원 규모의 배당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됐고 이는 출자금 대비 무려 21배, 승인 당시 추정 배당이익 대비 8.8배이상의 규모이다.

또한, 대립산업과 대립코퍼레이션이



164억원을 투자해 418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한 위례 뉴스테이(e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 사업은 부동산 산 가격 상승으로 이미 2,248억 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포현강 예비지에 참여한 금성백조 주택도 383억 원을 투자해 1,158억 원의 배당이익을 예상했는데, 출자사인 11배 이상인 4,440억 원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청산지점이 2026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9월 현재 출자금 대비 적게는 11배, 많게는 21배이상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부동산 시세에 따라 민간건설사의 배당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기금 배당은 민간 출자분에 대한 배당이익이 급증한 것과는 달리, 부동산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행복 프루지오(동탄2대우코크랩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당초 546억원에서 4,817억원으로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때, 기금 배당은 2021년 9월 현재 178억원으로 추정됐다.

청산지점이 2026년에 기금 배당이 381억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위례뉴스테이(e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와 김포현강 예비지도 마찬가지로 기금 배당에 부동산 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김윤덕 의원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은, 상한선인 캡이 씌여있지 않아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절반이상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라면, 민간 건설사가 무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뉴스테이 설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더 큰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민간수익과 개발이익환수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불법 선거헌수막 걸지 않겠습니다” 오는 2022년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정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지난 15일 JTV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헌수막 안 걸기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JTV전주방송 제공)

농협 청년 조합원 1.58% 불과

농촌 고령화 따라 신규 가입 연령대도 60세 이상이 절반 가량

농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인들의 대표 조직인 농협도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연령별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농협조합원 수는 211만 9,093명으로 고령 조합원은 70세 이상 조합원이 41.56%,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5.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 조합원은 농협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올해 농협 60주년 인데, 100년 농협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확장이 필요하다. 조합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을 사유로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12만7,000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농협에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연령대도 고령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조합원 신규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가입 조합원은 총 41만3,387명이다. 하지만, 이중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33.20%, 13만7,286명, 70세 이상은 15.92% 6만5,842명으로 60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49.12%를 차지했다.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가입자는 고작 6.8%로 70세 이상 가입자의 절반도 안 되는 2만8,309명에 그쳤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 조합원은 농협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올해 농협 60주년 인데, 100년 농협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확장이 필요하다. 조합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본격가동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오평근 의원, 부위원장은 진형석 의원이다. 또, 위원은 오평근(전주2), 김희수(전주), 나인환(김제2), 박용근(장수), 박희재(비례대표), 이병철(전주), 진형

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공공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평근 위원장(전주2)은 "제3기 특위 활동을 통해 인구유입, 지역산업육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추가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주민청구 개정 청구서 제출 6월 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 후, 전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은 1년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시 삼라농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라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고, 마지막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부결 처리했다.

한편, 작년 주민청구조례인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비슷한 사항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이날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1)은 마지막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라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과, 논의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권고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수소 전문 대학 과정 신설해야”

두세훈 도의원



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석·박사 12명을 배출하고, 6명이 관련 기업에 취직을 했으나,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에 맞는 전북도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소산업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수소산업 전문 인력 풀 확보,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 수소산업의 성과 여부는 바로 수소산업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먼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수소산업법을 신설했으나, 총명(팀장, 주무관)의 직원이 수소산업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무년수는 1년도 채 안돼 전문성이나 업무 지속성이 우려된다”면서 “반면에 강원도는 6명, 인천과 울산광역시도 각각 5명의 직원이 수소산업을 담당하고 있어 전북도 또한, 전문성 있는 집단인력을 확충하고, 수소산업 담당 전문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두 의원은 “수소 산학연관 협의체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전북도 수소산업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전문가 인력 풀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을러, 그는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맞춤형 연료전지 연구

이마저 올해 6월에 사업이 종료됐다”며 “전북도 수소산업이 본래에 올라가기까지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수소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며 “전북도가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두세훈 의원은 “이미 도내 확보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등 인프라를 제대로 써서 보배로 만드는 일은 전북도 몫으로 남겨져 있다”며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는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센터 건립,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김대중 도의원



사업은 전북 신원보증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며 “지상 11층, 지하층 규모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금융도시를 꿈꾸기에는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지난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20대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북신보의 현금성 자산 중 20%(400억원) 이하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9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도민의 열려가 가지도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전북금융센터 건립

용도시를 꿈꾸기에는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대중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적극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선물을 도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해에 강한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을”

최훈열 도의원



단계, 활동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로 구분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농민들이 이상기후 상황에서 제대로 품목별 적응대책 매뉴얼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 대책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도 전역에 벼 병해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며 “전북도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산인 쌀산업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벼 아삭도열병은 군산시 48.6%, 임실군 37.6%, 순창군 35%, 고창군 30%, 정읍시 28%, 부안군 26.3% 등 특히, 도내 서해 평야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벼 병해충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예년 대비(538kg/10a) 5~8% 정도가 감소하고,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가 농업부문 기후위기 사업을 단순히 나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연도를 설정해 기반구축

대처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적응대책 매뉴얼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벼 병해충 피해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논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신동진 벼가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데다, 2년 넘게 단일품종(신동진 벼)에 집중돼 이번 피해가 충분히 예견돼 있었다”며 “하루빨리 다양한 벼 품종을 개발해 신동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훈열 의원은 “그간 전북도가 다양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기후 위기 대응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다양한 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불법촬영 예방 사업

적극 시행해야

황영석 도의원, 조례안 발의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 황영석 부의장(김제 제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다.

황영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 총 4만7천420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5,423건으로 33%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이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도와 시·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탐지장치 설치 지원 및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민간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을러,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민간 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황영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전북도가 관련 정책 마련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본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김이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등 수도권 중심지역의 교통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재정분권위원회의 균특회계 지원이안으로 지역자율재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형 SOC 사업이나 굵직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공모 방식 등으로 진행되면서, 예비타당성 등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지역발전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기는 커녕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